"이젠 경제다" 순방 마친 文, 민생 챙기기 광폭행보 예고

기재부 내일 '주요 경제현안' 보고
21일 '혁신금융비전선포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박7일간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동남아시아 3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 16일 귀국한 가운데, 곧장 '경제 현안'을 챙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외교 현안뿐 아니라, 경제-민생 현안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다음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3국 순방 직후 곧바로 '경제와 민생 문제' 여기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알렸다.

윤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 받는다. 오는 21일에는 '혁신 금융 비전 선포식' 행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선포식에서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금융계 혁신안을 담은 정책과 비전을 발표한다. 선포식의 장소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순방 직후 곧장 경제 코스를 밟는 데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3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나 중·장년층 고용지표는 악화됐다. 50대 실업자 수는 20만6000명으로, 이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자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그뿐인가. 50대 실업자는 2017년 12월부터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실정이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수준에 근접했음을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등은 17일 전했다. 실제 작년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분기 대비 0.9%p 올랐다. 상승 폭은 BIS 통계 집계 대상인 중국(1.2%p) 다음으로 높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사'는 지난 4일 '세계거시전망 2019-2020'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이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무디스는 작년 11월 세계거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3%, 2020년 2.5%로 각각 진단했다.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최근 고개를 들자 야권의 질책도 등장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빠른 속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수요에만 집중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의 합작품"이라며 "그나마 경제성장률이 준수하다면 가계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무디스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 전망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위기"라고 꼬집었다.

즉 문 대통령이 순방 직후 곧장 경제 코스를 밟는 데는 부정적인 경제지표에 변화를 주기 위함인 셈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모호한 자영업 안돼… 명확한 소상공인 규정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정책토론회
황교안·나경원 등 1000여명 참석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업종·지역 단체 소속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해 분위기를 띄웠다.

여야 5당 대표들은 지난 1월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정부의 정책과 사회안전망 모두에서 소외당한 소상공인들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정의하는 경제헌법이 바로 소상공인기본법"이라면서 "중소기업기본법은 제정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경제학자들도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한 자영업이 아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명확하게 소상공인들을 규정하여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눈으로 확인했다"면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소상공인들과 어깨 걸고 나서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으로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은 "정부 통계로도 사회 양극화가 입증됐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렇게 소상공인연합회가 하나로 단결해 나간다면 소상공인들도 대한민국에서 가슴 펴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제는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가 나섰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 업종은 우리나라의 풀뿌리 경제를 이루고 있지만 진입장벽이 낮고 생활밀착형이라는 특성을 보인다"면서 "소상공인정책은 기존 중소기업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다뤄야 하며 은행 문턱조차 넘기 힘들어 소외당하는 현실을 극복해 스타벅스나 나이키처럼 소상공인들이 세계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중 한 명인 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기본법의 끝자락에서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방치되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러다 보니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관련한 법조문 하나 바꾸는데 수년의 세월이 지나는 등 개별법 지원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부회장은 "안개 같은 모호한 자영업 개념으로는 전문직, 고소득 기업, 프리랜서 등 개념이 혼재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기본법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학적 정립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文 대통령 지지율 1.4%p 내린 44.9%

北 '비핵화 중단' 언급에 악영향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비핵화 중단' 언급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 부상은 최근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 지난 15개월간 우리가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협상할 생각이 없다"며 한반도 정세에 냉기류를 유발시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7명을 대상으로 '3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7.8%)'를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4%p 내린 44.9%, 부정평가는 2.9%p 오른 49.7%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로 최 부상의 비핵화 중단 언급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표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이어진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래선지 청와대는 최 부상의 비핵화 중단 언급에 대해 즉각 분석에 들어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부상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비스러울 정도로 화합이 잘 맞는다고 했다. (또) 최 부상은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향후 북미 협상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 중"이라고 진단했다.

/우승준 기자

고용부, 구직 청년에 매월 50만원 준다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이달 25일부터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으로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중기부, 올 메이커문화 사업에 44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에 이어 메이커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중기부는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 추진계획을 19일 공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이란 메이커 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는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발굴·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메이커 창작활동을 비롯해 메이커 동아리, 복합 프로젝트, 해외 메이커 페어 참가, 메이커 행사,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등 6개 분야, 349개 과제(기관)를 선정해 총 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메이커 창작활동과제 130개를 선정, 과제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청소년, 성인 대상 160개 메이커 동아리를 발굴해 동아리 당 350만원의 활동비용도 준다.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 7개 과제와 민간의 다양한 메이커 문화행사 20여 개도 발굴 지원한다. 메이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해 우수 메이커 20개 팀을 선정, 해외 메이커 페어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